국회토론회 <새 정부 문화정책, 문화사회를 향한 정책과제들> 발제문

새 정부 문화공약 분석 및 문화정책 혁신을 위한 기본 방향

이원재/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소장

1.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였다.

대통령 임기 5년에 맞추어 출범한 것이 아니라 전직 대통령의 부패와 몰락 그리고 "촛불 국민들"의 직접민주주의로 탄생한 정부다. 국민들은 자신들을 "개, 돼지" 취급했던 그 낡고 부패한 권력을 스스로의 힘으로 무너뜨렸고 거대한 분노를 새로운 희망으로 바꾸어 놓았다. 지금 국민들은 때로는 설렘과 기대로, 때로는 걱정과 우려로 새로운 정부, 새로운 희망과 마주하고 있다.

박근혜정부의 부패와 무능 아니 "비정상성"이 워낙 심각하고 충격적이었기 때문인지, 새로운 대통령의 "허니문 시즌"에 대한 예우 때문인지, 새 정부에 대한 훈훈한 미담들이 매일 같이 언론을 장식하고 있다. 특히 집권과 동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한 초기 인사와 행정 조치들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가 뜨겁다. 대통령 한 명이 바뀌었을 뿐인데 간단한 행정 조치들로 오래된 문제들이 하나, 둘 해결될 때 마다 신기하고 반갑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당혹스럽고 씁쓸하다. 그렇게 견고하고 어렵던 일들이 대통령 말 한마디로 해결될 수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때마다 국가와 행정에 대해 깊은 의문을 품게 된다.

2.

한편 문재인 대통령이 파격적인 인사를 발표하고, 혁신적인 행정 조치를 지시할 때마다 "문화정책은..."이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떠오른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과 새 정부 출범 과정에 있어 문화행정의 부패 구조와 블랙리스트 사태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본인은 물론 김종덕, 조윤선 전 · 현직 두 명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그리고 다수의 관료들이 예술 검열을 둘러 싼 불법 행위로 구속되었다. 새 정부에서 부패한 문화행정의 구조를 개혁하고 새로운 시대를 위한 혁신적인 문화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이유다. 단순히 분야별 정책의 차원으로 접근해서는 곤란하다. 새 정부의 문화정책 혁신

과정은 기존의 정부들과는 달리 낡고 부패한 행정구조의 청산, 새로운 사회적 가치 및 삶의 방향성 제시와 좀 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새 정부는 다른 분야와 달리 문화정책과 관련해서 혁신적인 인사나 행정 조치 등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취임한 지 불과 한 달도 되지 않은, 아직 내각도 구성되지 않은 새 정부에 대해 미리부터 쓴 소리를 하고 싶지는 않다. 문화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배려를 조르고 싶은 마음도 없다. 하지만 새 정부는 박근혜정부로부터 블랙리스트 문제를 비롯하여 낡고 부패한 문화행정의 유산들을 물려받은 것이 사실이다. 새로운 정부, 새로운 문화정책의 출발점은 어쩔 수 없이 여기서부터, 그 유산에 대한 입장과 태도에서부터 시작된다.

3.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 민주당의 첫 번째 문화공약 역시 "문화계 블랙리스트 적폐청산"이다.

새로운 정부의 출범 배경 그리고 현장 문화예술계의 요구를 반영하여 "문화계 블랙리스트 적폐청산"이 문화공약의 첫 번째 자리를 차지했다. 그리고 그 세부 내용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 및 시정조치", "정부 · 지원기관 · 문화계 간 '공정성 협약' 체결"('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 준수), "문화예술 지원기관의 독립성, 자율성 보장", "문화예술 지원심사의 투명성 확대", "현장 문화예술인의 지원정책 결정 참여 확대", "문화 옴부즈맨 제도 도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블랙리스트 국면에서 그리고 이명박정부, 박근혜정부의 파행적인 문화행정 속에서 현장 문화예술인들이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던 "예술 검열 반대 및 진상 규명", "현장 문화예술인들과의 적극적인 협치", "문화예술계 및 문화예술전문기관의 독립성 보장" 등이 잘 반영되어 있는 약속이다. 이제는 이 약속들을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지속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제도와 구조들을 직접 만들어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4.

문화계 블랙리스트 적폐청산을 포함하여 문재인 대통령은 새 정부의 문화공약으로 크게 9가지를 제시했었다.

"1.문화계 블랙리스트 적폐청산", "2.예술인 복지 사각지대 해소", "3.예술인의 창작권 보

장", "4.일상에서 문화 누리는 생활문화 시대", "5.창작 · 유통이 상생하는 문화산업 생태계 조성", "6.문화유산의 보존 · 활용으로 문화유산 가치 제고", "7.지역간 문화격차 해소로 문화균형발전", "8.모든 국민이 체육을 즐기는 스포츠 복지국가", "9.쉼표가 있는 삶, 관광복지사회 실현".

문재인 대통령의 문화공약은 전체적으로 문화정책의 최근 구조와 쟁점들을 잘 파악하고 있으며, 문화정책 내의 다양한 분야들을 균형감 및 현실감 있게 접근했고, 예술인들의 권리 증진에 대해 적극적인 입장과 개선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 등이 장점으로 평가된다. 특히 기존 정부들의 문화권 침해를 문화공약의 출발점으로 설정하고 "자율, 분권, 협치"라는 기본원칙을 제시한 것은 높게 평가해야 할 지점이다.

반면에 문재인 대통령의 문화공약은 좀 더 적극적이고 구조적인 개혁 프로그램이 부족하며, 분야별로 정책을 나열하는 기존의 문화정책 구조로 문화의 사회적 가치를 제한하고 있고, 변화된 사회 환경 혹은 사회적 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혁신적인 문화정책 의제(체계)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점이 한계로 보인다.

예를 들어 예술노동 정책의 경우 예술인 복지의 측면에서 다양한 혜택을 넓혀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술을 둘러 싼 노동권 자체에 대한 사회적, 제도적 인정을 추진해야 한다. 문화산업 생태계 정책 역시 지원 확대와 유통 개선을 넘어 공정한 시장 구조를 형성하기 위한 적극적인 독과점 규제 정책이 제도적으로 명시될 수 있어야 한다. 지역문화 정책의 경우 지원사업의 균형이나 형평성 차원이 아닌 지역화의 가치와 환경 자체가 새로운 문화정책 협력체계로 구조화될 수 있어야 한다. 돈 줄기 따라 움직이는 전달체계가 문화적 가치 중심의 협력체계로 전환되고 구조화될 수 없다면 문화균형발전은 요원하기 때문이다. 관광복지사회 실현 역시 공급형의 관광산업을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질 자체가 전환될 수 있도록 전면적인 노동시간 단축과 가치 있는 일 창출(일"자리"가 아니라)의 선순환 구조에 좀 더 주목해야 한다.

5.

새로운 정부 문화정책의 첫 번째 과제는 낡고 부패한 문화행정과 관료주의를 개혁하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문화공약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아니 그 약속이 실제로 집행되고 구현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문화행정의 전면적인 혁신이 전제돼야 한다. 지난 20여 년 동안 한국 사회의 문화정책은 질적, 양적으로 비약적인 팽창을 거듭했다. 과거 예술인 지원사업

정도로 이해되었던 문화정책은 도시재생, 사회혁신, 창조경제, 문화교육, 여가문화 등 현대 국가와 도시가 직면한 다양한 사회문제들을 해결하고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는 영역이 되었다. 이 과정에서 국가 단위 문화정책의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하여 정부 부처 전반에 걸쳐 문화사업의 규모가 크게 확대되었고, 지역문화재단을 비롯하여 다양한 문화 분야 전문기관들이 전국 곳곳에 설립되었다.

하지만 우리는 박근혜정부의 국정농단 사태를 통해 대한민국 문화행정의 맨 얼굴과 마주하게 되었다. 역설적이게도 국가 문화정책의 핵심 사업들은 비선 실세들의 먹잇감에 불과했고, 국민의 문화권리를 지켜야 할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한 국가 관료와 공공기관 종사자들은 법제도를 유린하며 예술 검열을 일상적인 국가 정책으로 운용했다.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21세기, OECD 국가에서 아무렇지 않게 자행되었고 지속될 수 있었을까?

우리는 박근혜정부 문화행정 파탄의 원인을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그것은 부패한 정치권력의 문제만이 아니라 부패한 정치권력에 영혼 없이, 성찰 없이 유착된 관료주의와 깊게 관련되어 있다. 언제나 눈앞의 성과를 외치지만 정작 민주주의, 창의성, 삶의 질 등에서는 너무나 무기력한 관료체제가 바로 문화정책의 진정한 걸림돌이다. 그래서 문화행정이 파탄난 국가, 새로운 정부가 추진해야 할 첫 번째 문화정책 과제는 바로 "국가 문화행정의 전면적인 그리고 본질적인 재검토"다.

새 정부 앞에 수많은 개혁과제와 다양한 아이디어가 있겠지만 문화행정 내부에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는 관료주의에 대한 철저한 개혁과 혁신이 없다면 과거의 악습을 반복할 것이다. 화려한 의전과 성과로 표류하는 문화사업들의 남발, 무늬만 그럴듯하지 국민들의 삶과는 무관한 혁신 의제들, 문화예술인들의 자율성과 창조성을 배제하고 박탈하는 행정장치들의 재생산...

문화예술의 자율성 역시 국가 문화행정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다. 국가 문화행정이 몰락한 국면에서조차 문화행정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불가능하다면 문화의 자율성 확보는 어쩌면 요원할 것이다. 블랙리스트 사태에서 확인했던 것처럼 성찰 없는, 오직 사업의 아이디어와 실적만이 중요한 관료주의자들에게 문화예술전문기관과 문화예술인들은 국가사업에 동원하고 통제해야 할 문화 "예비군"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지금 시점에서 국가 문화행정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재구조화 하는 것이야말로 문화예술인의 자율성, 문화예술전문기관의 독립성 등을 확보해 나가는 과정, 그 자체다.

새 정부는 낡고 부패한 문화행정의 혁신을 위해 "문화정책의 혁신과 비전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현재의 문화행정 파탄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 문화행정을 둘러 싼 관료주의에 대한 철저한 혁신이 그 대안의 출발점이다. 특별위원회는 다른 정책 부처와 달리 문화정책의 전면적인 재검토와 혁신을 추진하는 인수위원회의 성격으로 출발해야 하며 동시에 중장기 문화정책의 계획을 수립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이 과정을 통해서 현재 진행 중인 문화체육관광부의 신규 계획 수립 전면 중단, 현장 문화예술생태계와의 협치(민주주의와 거버넌스) 복원, 왜곡된 지원정책 전반에 대한 정상화, 문화행정 조직들의 재구조화와 전문기관의 독립성 강화, 혁신적인 문화정책 의제들의 발굴 등이 진행돼야 한다. 지금 우리는 "비정상의 정상화" 과정이 없이는 어떠한 아이디어도 문화예술생태계와 국민의 삶의 질에 도달할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다.

다음으로 문화예술인의 자율성 강화와 문화예술전문기관의 독립성 확보가 문화정책의 정상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동시에 추진돼야 한다. 현재 문화행정 구조에서 문화예술인들의 자율성이 강화되기 위해서는 국가 문화행정 전반에 대한 전면적인 협치 구조가 마련돼야 한다. 이미 서울시 등을 비롯하여 지방자치단체들에서는 보편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다양한 협치 모델들이 오직 중앙 정부에서만은 작동하지 않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를 포함하여 국가 문화정책의 철학과 방향 그리고 핵심사업들을 사회적으로 공유하고 숙의하고 협력할 수 있는 국가 단위의 "문화정책 협치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이를 통해 다양한 사회 주체들, 전문가들, 문화예술인들이 문화행정의 주체로서 참여하고 책임 있게 활동할 수 있는 자율적인 문화행정 토대를 조성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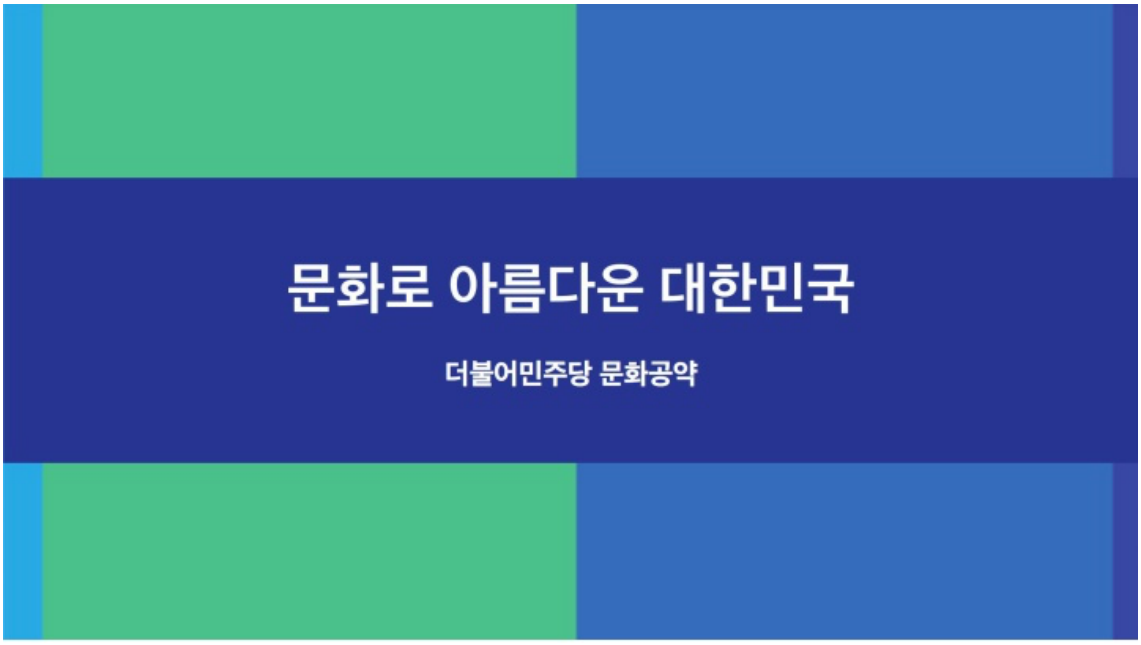
동시에 문화예술전문기관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문화행정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블랙리스트 사태의 원인에는 문화예술전문기관들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철저한 통제와 강압이 존재했다. 이는 이명박 정권 시절부터 강력하게 추진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등을 비롯한 문화예술전문기관 전반에 대한 청와대와 문화체육관광부의 비민주적인 통치 전략, 인사권과 예산권을 악용한 비열한 관리 체계의 결과물이다. 전문성과 독립성에 기반하여 운영돼야 할 문화예술전문기관들을 문화체육관광부 스스로 자신들의 사업 지시나 수행하는 "말 잘 듣는 외주업체" 수준으로 전락시킨 것이다. 급기야 박근혜 정권에서는 주요 문화예술전문기관들의 대표 인선을 기본적으로 수 개 월, 길게는 1년이 넘도록 공석으로 유지하는 파행적인 운영이 반복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 과장들 수준에서 문화예술전문기관들을 좌지우지하는 결과를 낳았고,

문화체육관광부 퇴직 관료들의 "낙하산 지대"로 국가 공공기관들을 퇴행시켰다.
결국 문화예술전문기관들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조직 혁신에서부터 그 출발점을 찾아야 한다. 이번 박근혜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에서도 확인되었듯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직접적으로 실행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해 왔다. 문화체육관광부에는 타 부처, 국가 단위의 문화정책 조율 기능만을 남겨두고 모든 실행 사업들을 국가 문화예술전문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전면 이관해야한다. 그리고 국가 문화예술전문기관에 대한 인사권과 예산권을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독립시킬 수 있는 장치들 역시 마련돼야 한다. 이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 영화진흥위원회, 예술경영지원센터,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생활문화진흥원,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극장 등 수많은 국가 단위 문화예술전문기관들이 존재한다. 지방자치와 지역화라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지역문화재단을 비롯하여 다양한 지역문화예술전문기관들이 빠르게 활성화되고 있다. 최소한 문화체육관광부의 반민주적인 통제, 비전문적인 사업 강요 등이 사라진다면 전국적으로 문화예술전문기관들의 전문성과 자율성은 크게 확장될 것이고 이는 국민들의 문화권과 삶의 질 향상으로 연결될 것이다.

7.

새 정부는 문화에 대한 "불개입 원칙"을 넘어 문화민주주의의 적극적인 실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대통령 취임사에서 "문화융성"을 언급했던 전직 대통령이 문화행정의 부패와 파행으로 인해 몰락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새 정부는 선거 과정에서부터 문화예술에 대해 개입하지 않고 독립성을 존중하겠다고 누차 강조해 왔다. 하지만 문화에 대한 "불개입 선언"만으로 우리 사회의 문화 환경과 국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것은 아니다. 역설적이게도 현재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한 문화행정의 현실을 직시한다면, 원론적이고 반복적인 "팔 길이 원칙"만으로는 아무 것도 변하지 않을 것이다. 새 정부의 통치자들을 향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업무보고 표지만 바뀌어서는, 새로운 대통령의 입맛에 맞게 사업들의 제목과 위치만 재구성해서는 문화정책의 미래가 없다.
혹시라도 전직 대통령이 문화융성을 강조했다고, 과도하고 맹목적인 문화사업 추진 과정이 문제를 심화시켰다고 해서 새 정부가 문화정책에 대해 거리두기를 해서는 곤란하다. 지금은 좀 더 적극적인 문화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해, 문화행정 혁신과 관료주의 해체를 위해, 박근혜정부와는 전혀 다른 방식의 적극적인 개입과 실천이 필요한 때다.

[참고자료]


문화로 아름다운 대한민국
더불어민주당 문화공약

문화권이 보장되지 않는 나라
문화자유권
문화창작권
문화경제권
문화향유권
문화자치권

문화자유권

- **헌법이 보장한 예술의 자유 침해**
  - 블랙리스트로 문화부와 예술지원기관이 검열기구로 전락
  - 민주주의의 근간인 표현의 자유 침해
  - 다양한 문화를 향유해야 할 국민의 문화권 제한
-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문화정책 기본원칙 훼손**
  - 주요 예술지원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성 침해
  - 불공정한 기금지원과 투융자로 문화생태계 왜곡
  - 선의의 기업메세나 위축

문화창작권

- **문예진흥기금 고갈에도 비선실세 사익챙기기 계속**
  - 문예진흥기금, 복권기금 투입으로 향유지원만 증가
  - 순수예술 창작지원 감소와 지원배제로 문화의 본원적 가치 위협
  - 예술인을 동원한 시혜성 무료행사 증가로 '문화는 공짜'라는 인식 확산, 순수예술의 자생적 기반 와해
- **유통 중심 문화산업 구조로 창작인과 중소제작사의 창작 및 발표기회 제한**
  - 대기업의 유통 독과점, 제작 겸업으로 불공정 거래 만연
  - 재무능력 중심의 정책금융지원으로 가치있는 콘텐츠에 대한 창작 지원 약화
  - 문화상품 매출 정보의 객관적 수집 제약으로 창작인과 제작사의 정당한 수익배분 저해

문화경제권

- **청년예술인의 꿈을 꺾는 열정노동, 불공정한 수익배분**
  - 일자리의 질 낮고 구두계약, 열정노동, 재능기부 등 만연
  - 창작인의 저작권이 보장되지 않는 수익배분 시스템
  - 합리적 보수기준 부재로 일한만큼 정당한 보수 못 받아
- **최고은을 구할 수 없는 최고은법**
  - 예술활동 관련 수입 월 100만원미만 예술인 65.1%
  - 고용보험 25.1%, 산재보험 26.0%로 예술인의 4분의 3이 사회보장 사각지대
  - 예술인복지법 산재보험만 지원, 고용보험 법제화 실패

문화향유권

- **소득, 지역, 연령에 따른 문화불평등**
  - 문화관람률은 78.3%이나 연1회 기준으로 문화의 일상화에 이르지 못해
  - 저소득층, 장애인, 읍면지역, 50대이상 문화관람률 격차 여전
  - 문화관람의 주요 장애요인은 비용부담과 시간부족
- **생활창작 욕구는 증가하고 있으나 여건 미비**
  - 생활권에서의 문화 관람, 교육, 참여 선순환 기반 부족
  - 사회문화예술교육 참여율 6.9%, 문화동호회 참여율 4.2% 불과
  - 지역문화진흥법 제정 이후 생활문화 정책이 시작되었으나 지자체와 파트너십 결여로 전국적 구상 갖추지 못해

문화자치권

- **지역문화재정 부족으로 국가 이전 재원에 의존**
  - 국세와 지방세 비율 8대 2로 '2할 자치' 라는 근본 한계
  - 지역의 자율적 사업기획과 투자 어려워
  - 지역 문화수요가 아닌 정부 지원방향에 따라 사업 전개
- **지역문화재단의 정부 위탁기관화**
  - 획일적 국고보조사업으로 지역특성 반영 한계
  - 국고보조사업이 늘어날수록 지역문화재단의 비정규직 증가로 경영 악순환
  - 학교예술강사 근로계약 문제를 지역문화재단에 전가, 이를 거부한 지역문화예술교육센터 지정 취소

문화로 아름다운 대한민국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 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겠기 때문이다. (김구, '나의 소원' 중에서)

문화공약

1. 이명박근혜 정권 9년의 적폐,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청산하겠습니다.
2. 예술인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3. 예술인의 창작권을 보장하겠습니다.
4.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는 생활문화 시대를 열겠습니다.
5. 창작과 유통이 상생하는 문화산업 생태계를 만들겠습니다.
6. 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으로 문화유산의 가치를 높이겠습니다.
7. 지역간 문화격차를 해소하여 문화균형발전을 이루겠습니다.
8. 모든 국민이 체육을 즐기는 스포츠복지국가를 만들겠습니다.
9. 쉼표가 있는 삶, 관광복지사회를 실현하겠습니다.

기본원칙

—

- 자율
- 분권
- 협치

1.
문화계 블랙리스트 적폐청산

-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 및 시정조치
- 정부·지원기관·문화계 간 '공정성 협약' 체결
  -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 준수
- 문화예술 지원기관의 독립성, 자율성 보장
- 문화예술 지원심사의 투명성 확대
  - 심의위원 및 심의결과 공개, 심사기록 작성·보관 의무화
- 현장 문화예술인의 지원정책 결정 참여 확대
  - 기관장 선임과 위원회 구성 시 현장 문화예술인의 참여와 추천권 보장
- 문화 옴부즈맨 제도 도입

2.
예술인 복지 사각지대 해소

- 예술인의 정신적 권리, 경제적 권리, 사회적 권리 보장의 제도적 근거 마련
  - 유네스코 '예술가의 지위에 관한 권고' 반영
- 예술인의 창조적 노동에 대한 공정한 보상 강화
  - 표준계약서 의무화
  - 경력, 활동유형에 따른 표준보수지급 기준 제정
  - 창작인의 저작권 수익분배기준 강화
  - '임금채권보장법'에 준하는 예술인 체불수입 보장제도 실시
- 예술인 실업급여 제도 도입, 예술인 보험료 국가 50% 지원
- 예술인복지금고 씨드머니 지원
  - 긴급생활자금, 상해·재난 지원 등 예술인 긴급지원시스템 구축
- 지자체와 협력, 예술인 임대주택 지원
  - 고시원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 있는 청년예술인 우선 지원

3.
예술인의 창작권 보장

-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안정적 재원 확보**
  - 창작지원 위한 국고 출연 확대
  - 체육·관광 여유기금의 전출
- **청년예술인 창작주거 인프라 조성 및 안정적 일자리 확충**
  - 지역 유휴공간 활용 예술창작공간 조성, 청년기획자와 예술인에게 작업공간 지원
  - 지역기반 문화콘텐츠 창작 주거 인프라 조성, 청년 콘텐츠 제작자 인큐베이팅
  - 예술교육, 생활문화, 지역문화재생 일자리 제공
- **민간 비영리 문화예술공간 지원**

4.
일상에서 문화 누리는 생활문화 시대

- **국민의 기초 문화생활 보장**
  - 문화·체육·관광 통합문화이용권 확대 및 지원금액 현실화
  - 문화·체육·관광 지출비의 근로소득세 세액공제 제도 도입
-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 확대**
  - 유아 창의놀이교육 확대
  - 아동·청소년 문화예술교육센터 조성(핀란드 아난딸로)
  - 학교 문화예술교육 확대 및 지역문화자원과 연계교육 강화
  - 지역 예술단체 및 문화시설의 사회문화예술교육 확대
  - 50+ 세대 위한 '생애전환 문화예술학교'(가칭) 운영
- **4차 산업혁명시대에 필요한 문화기술 활용역량 제고**
  - 공공도서관 및 문화시설에 메이커스페이스, 디지털미디어랩 조성
- **동네 생활문화 환경 조성 및 생활문화 동아리 활성화**
  - 유휴공간 활용 다양한 생활문화공간 조성(작은미술관, 작은영화관, 마을극장 등)
  - 실버극장 확충,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확대
  - 생활문화 동아리에 대한 연습·발표공간과 예술강사 지원
- **공공도서관의 지속적 확충과 장서 구입 확대**

5.

창작·유통이 상생하는 문화산업 생태계 조성

- **1인 창조기업, 중소제작사에 대한 정책금융지원 확대**
  - 모태펀드 운용의 투명성, 공정성 강화
  - 중소문화콘텐츠제작사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 완성보증제도 절차 간소화 및 출연자본 확대, 성과공유형 전환 등 제도 확대
  - 콘텐츠공제조합의 안정적 재원 확대
- **공정한 문화콘텐츠 제작환경 구축**
  -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독과점, 지위남용, 담합 등 금지
  - 문화콘텐츠 제작 표준계약서 확대
- **투명한 문화상품 유통정보시스템 구축**
- **4차 산업혁명 시대, 융합콘텐츠 발굴 육성**
  - 예술·과학·기술 융합플랫폼 확대 및 기업 성장단계별 맞춤 지원

6.

문화유산의 보존·활용 으로 문화유산 가치 제고

- **매장문화재 발굴비용 국가지원 확대**
  - 고도지역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공영제 도입
  - 개인, 중소사업체 등의 매장문화재 발굴비용 지원 확대
- **선진적 문화재 방재시스템 구축**
  - 문화재 지진방재 종합대책 마련
  - 문화재 재난안전 관리기반 강화
  - 문화재 일상관리 강화 위한 문화재 돌봄사업 확대
- **지역의 근현대 문화유산 보존 활용 확대**
  - 시도 등록문화재 지정제도 도입
  - 근·현대 문화유산 활용 지역역사문화 재생사업 지원
  - 3.1운동 100주년 계기 독립유산 등록문화재 지정 및 기념사업 추진
- **문화유산 교육 및 활용 확대**

7.
지역간 문화격차 해소로 문화균형발전

- **문화균형지수 개발, 낙후지역 우선 지원**
- **지역문화진흥기금 확충**
  - 지역문화진흥기금 출연 기부금을 법정기부금으로 인정
  -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 선택적 기금을 지역문화진흥기금으로 출연
- **지역문화재단의 운영 독립성, 자율성 보장**
- **지역문화재생 사업 확대**
  - 폐산업시설, 원도심 노후건물, 지하도·지하상가 등 활용 지역문화재생 사업 지원
  - 민간주도 유휴공간 리모델링 사업의 관광진흥기금 융자지원
- **문화도시 조성 활성화**
  - 문화도시 지정 및 집중 지원, 문화관광 연계 활성화

8.
모든 국민이 체육을 즐기는 스포츠 복지국가

- **체육계 적폐청산과 공정한 스포츠 생태계 조성**
  - 스포츠공정위원회 기능 강화
  - 체육단체의 자율성 보장
- **체육특기자 입시전형의 획기적 개선**
  - 공부하는 선수, 운동하는 학생 양성(최저학력제 도입)
  - 체육특기자 수업참여 보장 및 학사관리 강화
  - 선수생애관리제 도입
  - 학교체육진흥회 설치, 학생체육대회 분리 개최
  - 전문체육.생활체육.학교체육의 유기적 시스템 구축
- **스포츠 참여기회 확대, '국민 스포츠'로 전환**
  - 유아, 노인, 청소년, 장애 유형별 맞춤형 스포츠 확대
  - 초등학교 생존 수영 의무화 추진
  - 지역 단위 공공스포츠클럽 도입 및 공공체육시설 확충
-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 지원**

8.

모든 국민이 체육을 즐기는 스포츠 복지국가

- **체육인 복지 증진과 체육지도자의 처우 개선**
  - 체육인복지법 제정 및 체육인복지 재단 설립
  - 스포츠강사 처우개선
- **스포츠산업 육성과 스포츠를 통한 일자리 창출**
  - 스포츠기업 확인제 도입 및 창업지원센터 운영
  - 은퇴선수 취업지원 및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의무화
- **남북 체육교류 재개로 남북의 화해 협력**

9.

쉼표가 있는 삶, 관광복지사회 실현

- **여행이 있는 삶, 관광복지사회 실현**
  - 노동자 휴가지원제 도입(한국형 체크바캉스 제도 시행) : 정부, 기업이 근로자의 여행경비 매칭 지원
  - 관광지, 호텔, 관광버스 등 무장애(장벽 없는) 관광환경 조성
  - 대체공휴일제 전면 시행
  - 생애주기별 맞춤형 여행지원
- **관광산업의 질적 경쟁력 강화**
  - 개별 관광객 맞춤형 관광코스 개발
  - 외국어 안내체계, 교통편의 제고 등 통한 외래관광객 유입 확대
  - 개별관광객에 최적화된 온라인 플랫폼 운영
- **관광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 4차산업혁명에 대비한 융합관광산업 육성
  -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혁신적 관광벤처기업 육성
  - 다양한 관광 콘텐츠 및 여행상품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
- **관광을 통한 지역균형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 국가관광명소제도 도입. 지역별 특화관광명소 지정 및 집중육성
  - 지역관광전문인력 양성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 관광영향평가제도 도입, 국민관광신탁제 도입